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중부세 부부공동 명의도 16일부터 고령·장기공제 신청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중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는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했지만, 지난해 말 중부세법이 개정돼 부부공동명의를 단독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1주택 단독명의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나 1주택 단독명의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부부공동명의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로 적용가능한 공제율은 80%까지다.

따라서 젊거나, 단기 보유의 경우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거나 보유 기간이 길면 1주택 단독명의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진통’... 고용유지 완화에 경정대란 예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지난해 고용인원이 감소했다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연초 통과되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0년은 빼고 사후관리 기간을 계산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2019년부터 100명에서 110명으로 상시근로자가 늘어나 공제를 받았다면, 대기업은 2021년, 중소·중견기업은 2021, 2022년에 직원을 110명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이 때문에 2018년, 2019년 고용이 늘어났어도 상시근로자 유지조항 때문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

던 중소기업들이나 일부 의료업계(병원)에서 못받았던 공제를 받기 위해 경정청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고용이 줄었어도 2021년 고용인원을 다시 늘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기간이 1년 유예된 것뿐이라서 고용증대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면 환수대상이 되는 것이 되는 법 개정 이전하고 똑같다.

2019년 고용을 늘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2022년까지 고용증대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의 법정 세금(최저한세)은 납부해야 하고, 납부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48%, 기타대비 최대 7배...부자증세 과도"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 추진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의 소득자의 3~7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의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의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한경연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 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으로 고소득자에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